

#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

- 경 감 (1교시) -



성 명 :

응 시 번 호 :

## 응시자 유의사항

- ※ 경감(1교시) 시험 과목 : 행정학(05), 해양법(13)
- ※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.

# 해 양 경 찰 청

## 행 정 학

1. 다음 중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, 외부 효과의 발생, 불완전한 경쟁,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.
-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, 공적 유도, 정부 규제 등이다.
-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.
-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,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

2. 다음 중 사회적 자본이론(social capital theory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르디외(P.Bourdieu)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.
- ②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.
- ③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.
- ④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.

3. 다음 <보기>에서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<보 기> —
- ㉠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파악하며,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.
  - ㉡ 롤즈(Rawls)의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, 제2원리는 차등조정의 원리이다.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‘차등원리’가 ‘기회균등의 원리’에 우선되어야 한다.
  - ㉢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, 규범적,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,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.

- ① 0개      ② 1개      ③ 2개      ④ 3개

4. 다음 <보기>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 묶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<보 기> —
-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㉠ 정당   | ㉡ 국무총리  | ㉢ 대통령  |
| ㉣ 이익집단 | ㉤ 전문가집단 | ㉥ 시민단체 |
| ㉦ 언론   | ㉧ 부처장관  |        |

- ① ㉠, ㉡, ㉢, ㉤, ㉥      ② ㉠, ㉢, ㉣, ㉥, ㉧  
 ③ ㉠, ㉣, ㉤, ㉥, ㉦      ④ ㉡, ㉢, ㉣, ㉦, ㉧

5. 다음 중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델파이(Delphi)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.
- ② 브레인스토밍(Brainstorming)은 아이디어가 많은 소수에게 여러 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.
- ③ 지명반론자 기법(Devil's advocate method)은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이다.
- ④ 명목집단기법(Nominal group technique)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.

6.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리더는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.
- ② 자신감과 영감을 불어넣으며, 조직에 대한 팀스피리트(team spirit)를 고무시킨다.
- ③ 기존의 가정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.
- ④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.

7. 다음 중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.
-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.
-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.
- ④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.

8. 다음 중 티부가설(Tiebout Hypothesis)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.
-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.
-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.
-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.

9. 다음 중 덴하트(J.V.Denhadt)와 덴하트(R.B.Denhadt)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.
-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.
- ③ ‘전략적 사고’와 더불어 ‘민주적 행동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
-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‘방향잡기’와 함께 ‘봉사’를 강조한다.

10. 다음 <보기>에서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 기>

- ㉠ 정치·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.
- ㉡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후드(Hood), 오스본(Osborne)이 있다.
- 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.
- ㉣ 신행정학에서는 ‘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’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ㅊ, ㅋ  
③ ㄴ, ㅌ, 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ㄱ, ㄴ, ㅌ, ㅍ

11.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(top-down approach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힘들다.
- ②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주도한다.
- ③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(forward mapping)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.
- ④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·조직적·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.

12. 다음 중 재니스(Janis)가 주장한 집단사고(group think)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.
- ②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.
- ③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.
- ④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.

13. 다음 <보기>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?

## <보 기>

- ㉠ 역사요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㉡ 회귀인공요인  
㉢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       ㉣ 측정도구요인  
㉤ 다수 처리의 간섭  
㉥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

- ①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4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5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6개

14. 다음 중 민츠버그(H.Minzberg)의 다섯 가지 조직 설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전문적 관료제(professional bureaucracy)는 핵심 운영 중심의 구조이며,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.
- ② 에드호크라시(adhocracy)는 대개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.
- ③ 폐쇄체계(closed system)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.
- ④ 사업부 조직(divisionalized organization)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,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.

15. 다음 <보기>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— <보 기> —

- ㉠ ERG이론 : 앨더퍼(C.Alderfer)는 욕구를 존재욕구, 관계욕구,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‘좌절-퇴행’관계를 주장하였다.
- ㉡ X·Y이론 : 맥그리거(D.McGregor)의 X이론은 매슬로우(A.Maslow)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욕구를,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였다.
- ㉢ 기대이론 : 브룸(V.Vroom)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, 결과에 대한 보상, 그리고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.
- ㉣ 형평이론 : 아담스(J.Adams)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.

- ① ㉠, ㉡      ② ㉠, ㉣      ③ ㉡, ㉣      ④ ㉠, ㉣

16. 다음 중 정책수단(policy tools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.
- ②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.
- ③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면허란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.

17. 다음 <보기>에서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— <보 기> —

- ㉠ 추출정책 - 부실기업 구조조정
- ㉡ 구성정책 - 정부조직 개편
- ㉢ 분배정책 - 신공항 건설
- ㉣ 상징정책 - 노령연금제도

- ① ㉠, ㉡      ② ㉠, ㉣      ③ ㉡, ㉣      ④ ㉡, ㉣

18. 다음 중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.
- ② 직무 풍요화(job enrichment)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,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,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.
- ③ 직무 확장(job enlargement)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,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.
- ④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.

19. 다음 중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.
-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.
-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.
-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.

20.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철의 삼각(iron triangle) 모형에서는 이익집단, 관련 행정부처(관료조직),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.
- ② 하위정부(subgovernment)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.
- ③ 정책공동체(policy community)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.
- ④ 이슈네트워크(issue network)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.

21.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.
- ②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.
- ③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.
- ④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.

22. 다음 중 「인사혁신처 예규」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시차출퇴근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근무시간선택형  
③ 재택근무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집약근무형

23.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.
- ② 우리나라 「국가공무원법」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 개념인 ‘직위, 직군, 직렬, 직류, 직급’ 등이 제시되어 있다.
- ③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.
-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.

24. 다음 <보기>의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?

## <보 기>

이론이나 지식 전달위주의 전통적인 강의식·집합식 교육이 아닌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, 사례조사와 성찰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훈련 방식이다.

- ① 감수성훈련(sensitivity training)
- ② 강의(lecture)
- ③ 현장훈련(on-the-job training)
- ④ 액션러닝(action learning)

25.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?

- ① 연쇄효과(halo effect)
- ② 규칙적 오류(systematic error)
- ③ 집중화 경향(central tendency)
- ④ 총계적 오류(total error)

26. 다음 중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.
-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.
-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27.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.
-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·복지,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.

28. 다음 중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.
- ②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.
- ③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.
- ④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.

29.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가자의 직관과 선형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,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.
-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평정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가지나,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.
- ③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,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.
- ④ 대인비교법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.

30.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,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.
- ②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,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.
-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,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.
- ④ 국회는 발의·제출된 법률안을 수정·보완할 수 있지만,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.

31. 다음 중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일성의 원칙 - 특별회계, 추가경정예산
- ② 사전의결의 원칙 - 준예산, 전용
- ③ 한계성의 원칙 - 총액계상, 수입대체경비
- ④ 완전성의 원칙 - 전대차관, 현물출자

32. 다음 <보기>에서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— <보 기> —		
㉠ 소득세	㉡ 부가가치세	㉢ 법인세
㉣ 종합부동산세	㉤ 개별소비세	㉥ 주세
㉦ 인지세	㉧ 상속세	

- ① 1개      ② 2개      ③ 3개      ④ 4개

33.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.
- ②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.
-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.
-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,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,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.

34. 다음 중 영기준 예산제도(ZBB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- ② 예산과정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된다.
- ③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.
- ④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므로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.

35.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, 관, 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.
- ③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·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- ④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.

36. 다음 <보기>에서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?

— <보 기> —	
㉠ 인포데믹스(infordemics)	
㉡ 집단극화(group polarization)	
㉢ 선택적 정보접촉(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)	
㉣ 정보격차(digital divide)	

- ① 1개      ② 2개      ③ 3개      ④ 4개

37. 허시(P.Hersey)와 블랜처드(K.Blanchard)에 의하면 정부 운영방식은 정부를 둘러싼 환경, 특히 국민의 성숙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. 다음의 접근방법 중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운영의 방식은?  
① 설득      ② 위임      ③ 협상      ④ 참여

38. 다음 중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정부의 모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  
① 유연성·창의성·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.  
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  
③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구한다.  
④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.

39. 다음 <보기>에서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<보 기>
- ㉠ 사법부에 의한 통제
  - ㉡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
  - ㉢ 시민에 의한 통제
  - ㉣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
  - 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
  - ㉥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

- ① ㉠ ㉡ ㉢
- ② ㉡ ㉣ ㉤
- ③ ㉠ ㉤ ㉥
- ④ ㉢ ㉣ ㉥

40. 다음 <보기>에서 조직 개혁에 있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적인 ‘규범적·사회적 전략’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<보 기>
- ㉠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
  - ㉡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활용
  - ㉢ 집단 토론과 훈련의 확대
  - ㉣ 적절한 시기의 선택
  - ㉤ 긴장 분위기 조성 과 압력의 행사
  - ㉥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치

- ① 1개      ② 2개      ③ 3개      ④ 4개



## 해 양 법

1. 다음은 「해양경찰법」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.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(가)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(나)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- ① 가 15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 치안정감  
 ② 가 15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 치안감  
 ③ 가 20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 치안정감  
 ④ 가 20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 치안감

2. 다음 중 「해양경비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「통합방위법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해양경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
 ③ 해양경찰청장은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 
 ④ “경비수역”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, 근해수역 및 원양수역을 말한다.

3. 다음 중 「수상레저안전법」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 총톤수(「선박법」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)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등록대상이다.  
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 
 ③ 매매·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 
 ④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말소등록 사유이다.

4. 다음은 「해사안전법」상 수역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.  
 ②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.  
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, 위험물운반선,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.  
 ④ 해양경찰청장은 거대선, 위험물운반선,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내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.

5. 다음 중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 
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(장애물)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.  
 ③ “계류”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 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  
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으로 5회 울려야 하며,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.

6. 다음 중 「선박직원법」상 해수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
 ②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 
 ③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 
 ④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


7. 다음 중 「해양환경관리법」상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 물질이 해상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 방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, 이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해상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8. 다음 중 「해운법」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선박운항관리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.
-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9. 다음 중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

(㉠)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(㉡)마다 연안 사고 예방 (㉢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- ① ㉠ 해양수산부장관    ㉡ 3년    ㉢ 기본계획
- ② ㉠ 해양경찰청장    ㉡ 5년    ㉢ 기본계획
- ③ ㉠ 해양경찰청장    ㉡ 3년    ㉢ 기본계획
- ④ ㉠ 해양경찰청장    ㉡ 5년    ㉢ 시행계획

10. 다음 중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(어업지도선,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1. 다음 중 「어선법」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.
- ㉡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.
- ㉢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㉣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12. 다음 중 「수산업법」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에 있다.
- ②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.
- ③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에 있다.
- ④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.

13. 다음 중 「어촌·어항법」 상 어항개발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어항기본사업
- ②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
- ③ 어항환경개선사업
- ④ 어항관광발전사업

14. 다음 중 「항만법」 상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국가관리무역항
- ② 지방관리무역항
- ③ 국가관리연안항
- ④ 지방관리연안항

15. 다음 중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

㉠ (가)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·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(나)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(다)하여야 한다.

㉡ (라)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(마)하여야 한다.

- ①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나 등록 다 신고  
라 항만운송사업 마 등록
- ②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나 신고 다 등록  
라 항만운송사업 마 신고
- ③ 가 항만운송사업 나 등록 다 신고  
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마 등록
- ④ 가 항만운송사업 나 신고 다 등록  
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마 신고

16. 다음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 유·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을 설명한 것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㉠ 총톤수가 ( )톤 이상인 선박

㉡ 총톤수가 ( )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( )명 이상인 선박

㉢ 유·도선 사업의 영업구역이 ( )해리 이상인 경우

- ① 24
- ② 25
- ③ 34
- ④ 35

17. 다음 중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소형 유·도선은 ( )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·수세·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.

- ① 길이 12m
- ② 길이 24m
- ③ 총톤수 3톤
- ④ 총톤수 5톤

18. 다음 중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.
-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, 초단파 무선전화,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·권고·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9. 다음 중 아래 <보기> 안의 법(법률)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?

<보 기>

㉠ 해양경비법

㉡ 해양경찰법

㉢ 유선 및 도선 사업법

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
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

㉥ 수상레저안전법

㉦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

- ① 해양경찰청이 단독 소관 하는 법률은 모두 6개이다.
- ②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이다.
- ③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의 경우 제정은 되었으나,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.
- ④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상 내수면과 해수면은 모두 해양경찰의 관할이다.

20. 다음 중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상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?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한다.
- ② 중앙구조본부장이 위촉하는 “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”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1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상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은 (㉠)이라고 하고,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하천, 댐, 호수, 저수지,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은 (㉡)이라고 한다. 다음 중 ( 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㉠ 외수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㉡ 내수면
- ② ㉠ 해수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㉡ 담수면
- ③ ㉠ 영해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㉡ 담수면
- ④ ㉠ 해수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㉡ 내수면

22. 다음 중 「선박안전법」 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?

- 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일반화물선
- ㉡ 선박길이가 15미터인 컨테이너선
- ㉢ 선박길이가 20미터인 공기부양선
- ㉣ 선박길이가 11미터인 여객선
- ㉤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
- ㉥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23. 다음 중 「선원법」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② 소방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, 국내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4. 다음 중 「도선법」 상 강제도선 및 도선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강제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며,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0개 항이다.
-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.
-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.

25. 다음 중 「선박법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순톤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.
- ②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국경일,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은 선박이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도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의 국가적 행사 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.
- ④ 선박의 명칭은 선수양현의 외부 및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(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)로 표시하여야 한다.

26. 다음 중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상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·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로 한다.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접한 시·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·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.
- ③ 접속수역의 범위를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24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③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·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27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 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,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②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.
- ③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.
- ④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.

28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에 규정된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.
- ②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·영해·군도수역·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.
- ③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.
- ④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.

29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에 규정된 해양경계획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륙붕의 범위는 대륙변계의 외측 한계가 200해리에 미달하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.
- ② 영해를 10해리로 선포한 경우 그 외측 14해리의 범위 내에서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③ 군도수역의 기선은 그 내측의 수역과 육지의 비율이 1:1에서 9:1 사이의 범위 내에 있도록 확정되어야 한다.
- ④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를 넘거나 2,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.

30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기관이 아닌 것은?

- ① 국제사법재판소
- ②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
- ③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
- ④ 상설중재재판소

31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 상 영해 및 내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다.
- ② 해안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 가까이 도서가 많이 산재한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③ 종래에는 내수가 아니었으나 직선기선을 설정함에 따라 새로이 내수로 편입되는 수역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.
- ④ 평시의 경우 영해에서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.

32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에 따라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연안국이 그 외국선박 내에서 체포나 수사 등의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㉠ 선박의 소유자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
- ㉡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㉢ 범죄의 효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
- ㉣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

- ① 없음      ② 1개      ③ 2개      ④ 3개

33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영해에서 무해통항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.

③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표도 없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해안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아주 가까운 섬이 산재한 경우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.

34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 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,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,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.

②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.

③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,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.

④ 통과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이다.

35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
① “추적권”이란 국제법을 위반한 외국선박이 도주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다.

② 통상기선은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고조선으로 한다.

③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하다.

④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통과통항 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.

36. 다음 중 「UN 해양법협약」 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연안국은 대륙붕에서는 아무런 배타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.

② 연안국은 대륙붕의 상부수역,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, 개발,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할권을 갖는다.

③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.

④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인 바,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하지 않다.

37. 다음 중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상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조치는 무엇인가?

①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」 제111조에 규정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② 정선·검색·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그 군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

④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 할 수 있다.

38. 다음 중 「해양과학 조사법」 상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㉠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

㉡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

㉢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

㉣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

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39. 다음 중 「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」상 ( )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㉠ 총톤수 30톤 이하 어선(부속선은 제외한다)의 기본입어료는 ( )만원이다.

㉡ 외국선박을 정선시키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단광 ( )회, 장광 ( )회, 단광 ( )회를 ( )초의 간격으로 계속 신호한다.

㉢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또는 어업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( )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① 15

② 16

③ 17

④ 18

40. 다음 중 「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포함하는 수역으로 한다.

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 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.

③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.

④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한다.